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40-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에너지전환 4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2021. 7. 28.

담당자 오승호 부장

전화 | 02-3014-0167

e-mail shoh@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에너지전환 4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들어가며

- 지금으로부터 4년여 전인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에너지전환은 발전믹스(Mix)의 변화를 넘어,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와 저효율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반의 혁신¹⁾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차츰 줄여나가 결국에는 제로로 하는 ‘탈원전 정책’,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는 정책, 전기자동차·에너지저장장치(ESS)·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을 키우는 정책,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을 차츰 줄여나가 결국에는 제로로 하는 ‘탈석탄 정책’ 등이 주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 ‘에너지전환 4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6월 17일 ~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 인식 지형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정책이 시작되었던 2017년 9월과 11월 진행했던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인식의 변화도 동시에 살펴보았다.
- 주요 에너지원별 이용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0% 이상으로 높았으나 2017년 11월 대비 감소하였다. 반면 원자력 이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17년 11월 대비 상승하였다.
-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7%,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42%로 오차 범위를 고려해 볼 때 긍정과 부정 평가가 큰 차이가 없었다.
- 에너지전환 주요 4대 정책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책의 설명을 제시하고 찬반을 물어본 결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찬성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78%)’, ‘탈석탄(75%)’ 역시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였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는 5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 2017년 9월 조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이 진보층 87%, 보수층 52%로, 35%포인트 차이가 났다. 당시에도 적지 않은 차이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진보층은 79%, 보수층 31%가 ‘탈원전 정책’에 찬성 한다고 답해 그 차이가 47%포인트로 더 커졌다.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차이를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795>

1

에너지원별 이용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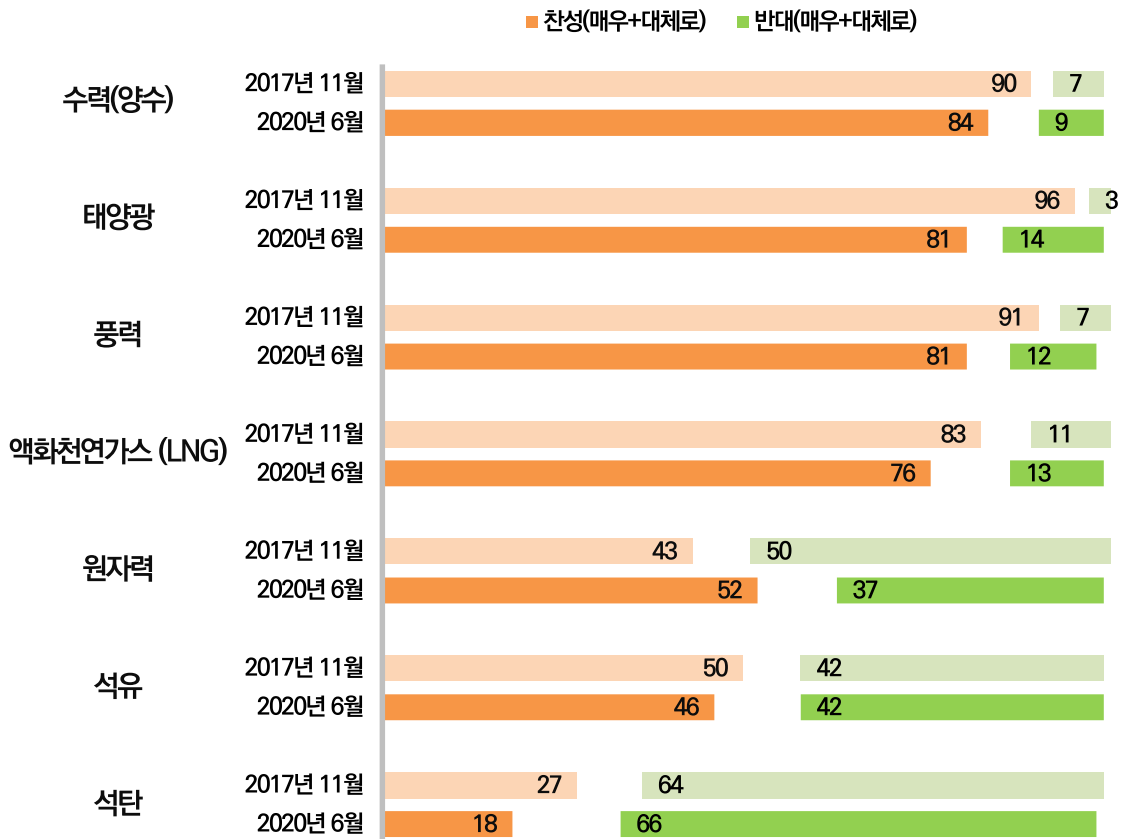
신재생 에너지, 화석 에너지 이용 찬성 응답은 2017년 11월 대비 소폭 하락 원자력 이용 찬성 비율은 9%포인트 상승

국내 주요 에너지원 이용에 대한 찬성 의견을 확인한 결과 수력(양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 찬성 응답은 2017년 11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80% 이상으로 높았다. 석유(이용 찬성 46%, 4%포인트 감소)와 석탄(19%, 9%포인트 감소) 등 화석에너지 이용 찬성 응답 역시 감소하였다.

주요 에너지원 중 원자력 에너지만 유일하게 이용 찬성 응답이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원자력 이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2%로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낮았으나, 2017년 11월(43%) 대비 9%포인트 높아졌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 찬성, 80% 이상으로 높으나 2017년 11월 대비 소폭 하락
원자력 에너지 이용 찬성 응답은 9%포인트 상승

(단위 : %)



질문 : 각 에너지원의 이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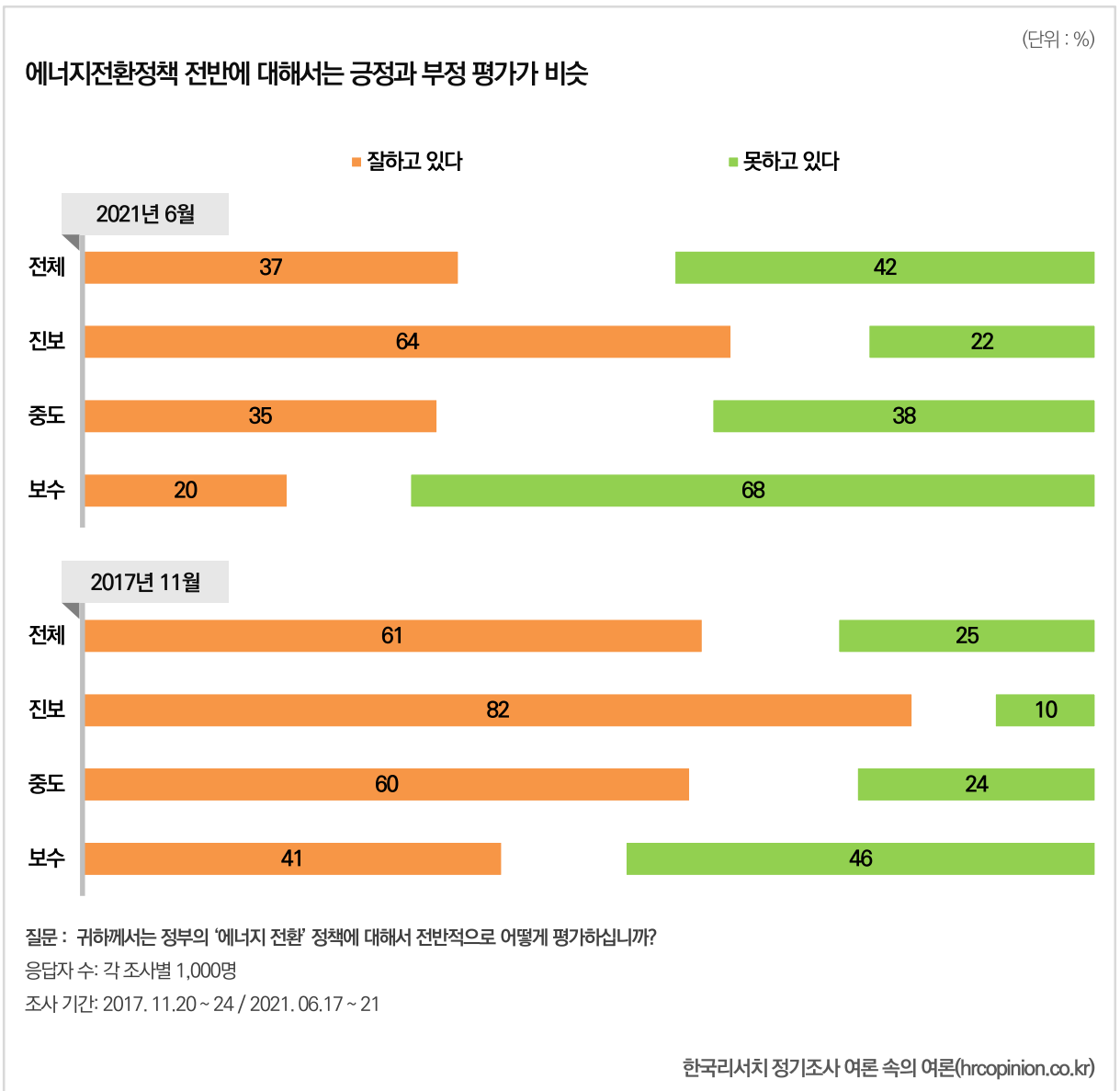
조사 기간: 2017. 11.20 ~ 24 / 2021. 06.17 ~ 2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평가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 4년 전 대비 긍정 평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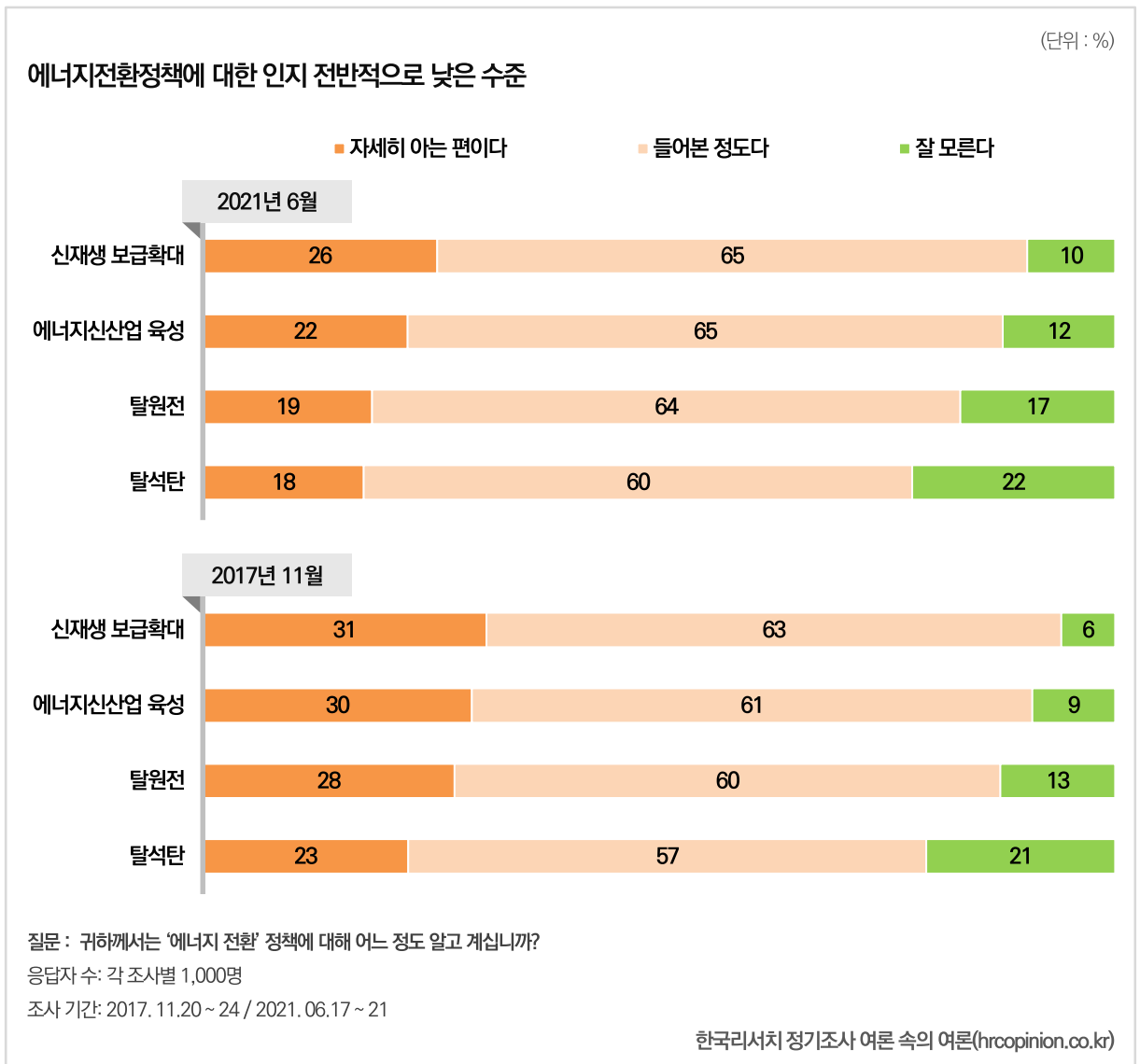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7%,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42%로 오차 범위를 고려해 볼 때 긍정과 부정 평가가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2017년 11월 조사와 비교할 때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24%포인트 감소(61%→37%)했는데, 4년 사이에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다. 보수층(긍정평가 41% → 20%, 21%포인트 감소) 뿐만 아니라 중도층(60% → 35%, 25%포인트 감소)과 진보층(82% → 64%, 18%포인트 감소)에서도 정책 긍정평가 감소폭이 컸다.



3 에너지전환정책 세부 정책별 인지 수준

에너지전환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4년 전에 비해서도 더 낮아진 상황

에너지전환 세부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주요 4대 에너지전환 정책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자세히 안다'는 응답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26%)', '에너지신산업 육성(22%)', '탈원전 정책(19%)', '탈석탄 정책(18%)'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인지 수준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고, 2017년 11월 조사와 비교해서도 4대 정책 모두 '자세히 안다'는 응답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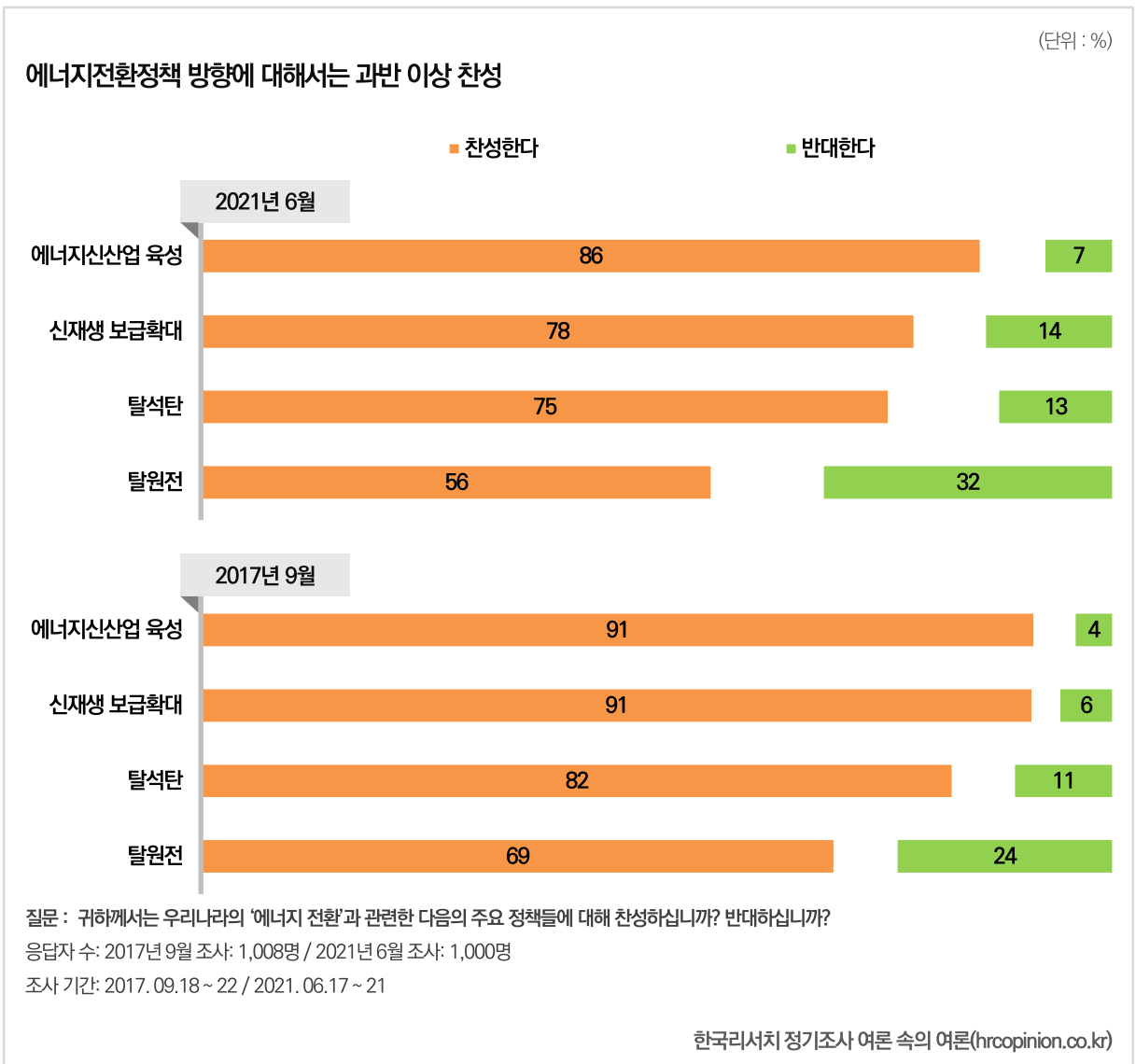
4

에너지전환정책 세부 정책별 찬반여부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이 과반을 넘었으나, 4년 전 대비 찬성 비율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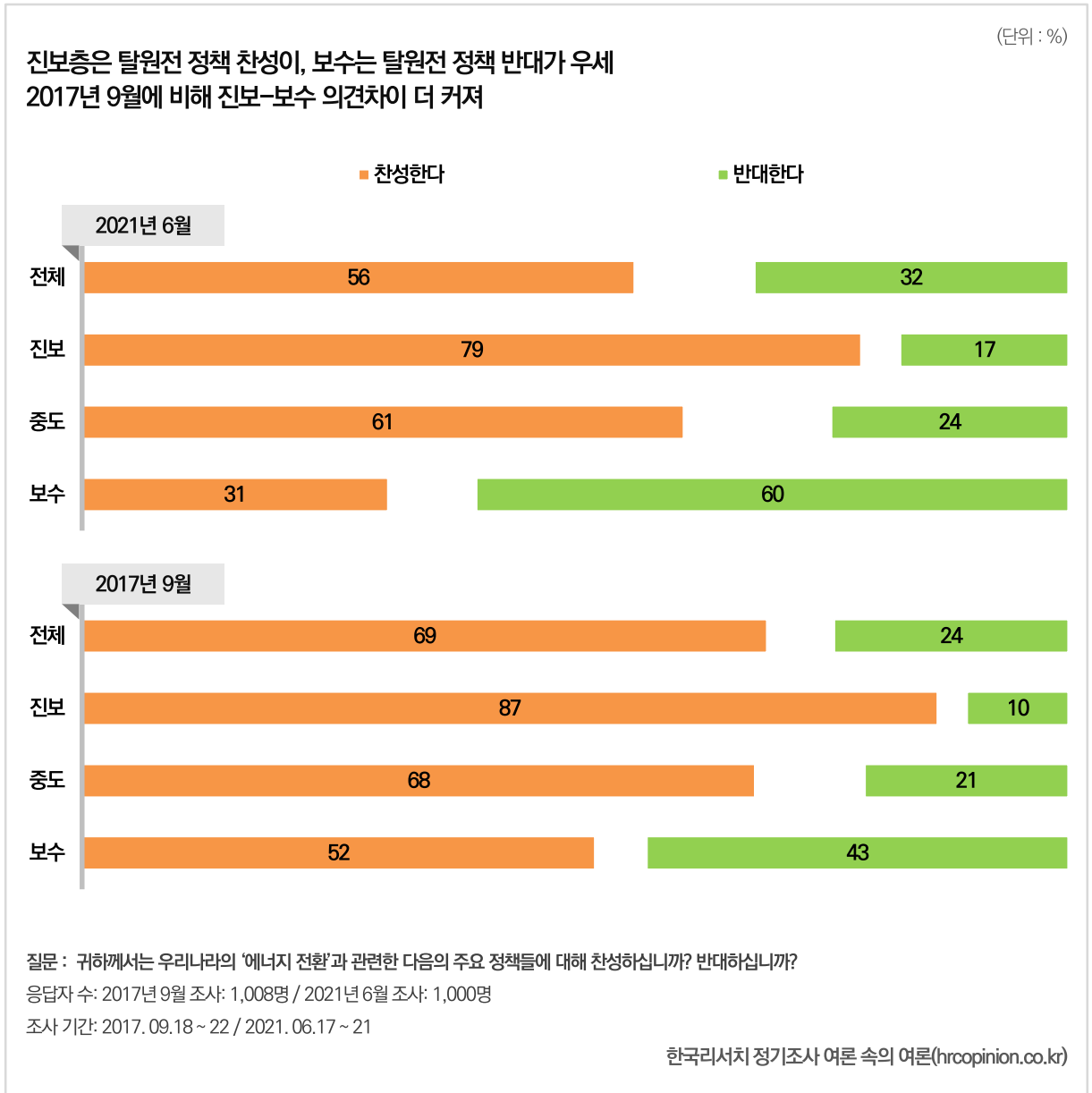
인지도는 낮았으나, 에너지전환 주요 4대 정책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책의 설명을 제시하고 찬반을 물어본 결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찬성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78%)', '탈석탄(75%)' 역시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였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는 5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2017년 9월 조사에 비하면 4개 정책 모두 찬성 비율이 감소하였다. '에너지신산업 육성(91%→86%, 6%포인트 감소)', '탈석탄(82%→75%, 7%포인트 감소)' 정책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91%→78%, 13%포인트 감소)'와 '탈원전(69%→56%, 13%포인트 감소)' 정책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진보-보수 의견차이 더 커져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보층과 보수층 간의 시각 차이가 4년 전에 비해 더 커졌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2017년 9월 조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이 진보층 87%, 보수층 52%로, 35%포인트 차이가 났다. 당시에도 적지 않은 차이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진보층은 79%가, 보수층 31%가 ‘탈원전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해 그 차이가 47%포인트로 더 커졌다.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차이를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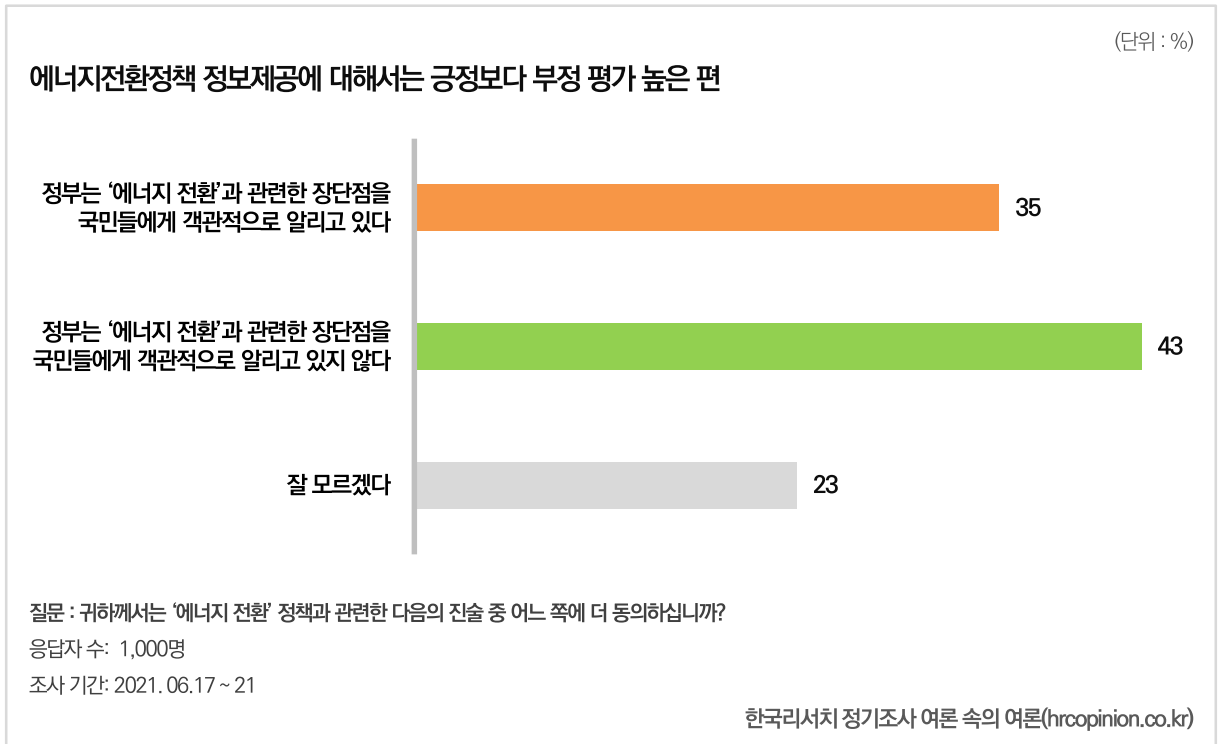


5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제언

첫째, 에너지전환 정책 정당성 강화를 위해 '객관적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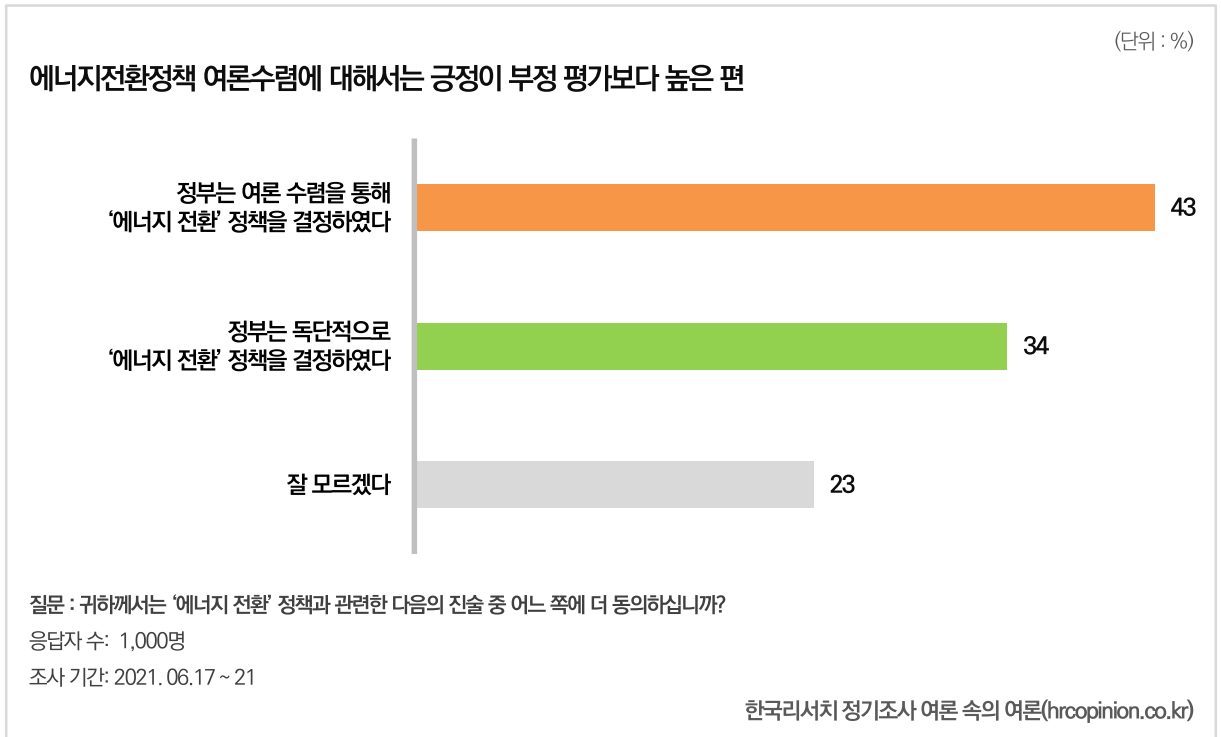
에너지전환 주요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찬성 의견이 여전히 높다. 하지만 각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전반적인 평가 역시 나빠졌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제한적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알리고 있다' 고 답한 응답은 35%로, '객관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다'는 응답(43%)보다 낮았다. 앞서 언급했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됐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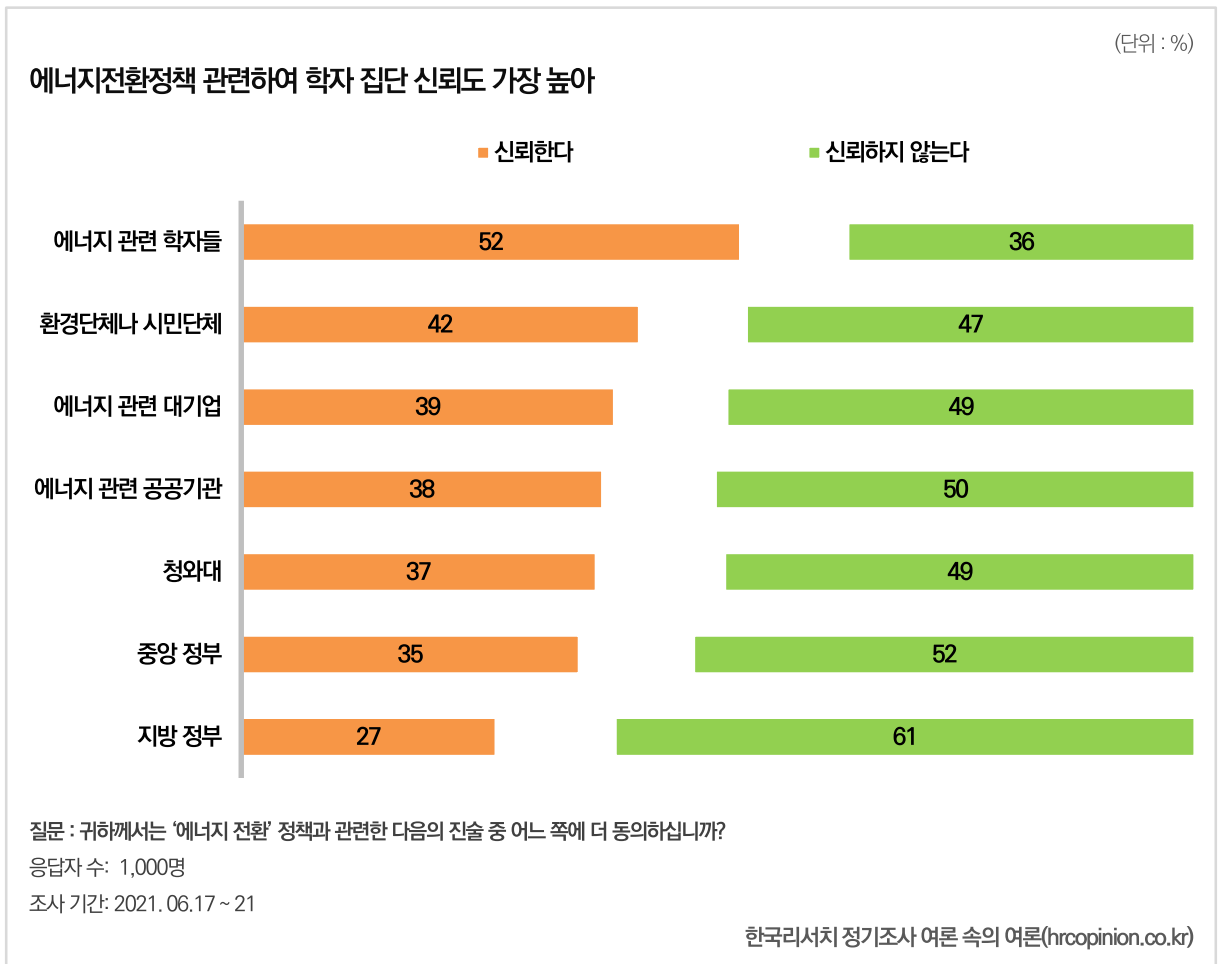
둘째,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 측면에서 정책PR 강화

둘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론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결정하였다’는 응답(43%)이 ‘정부는 독단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결정하였다’는 응답(34%)보다 높았으나,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중요한 정책 추진 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셋째, 에너지전환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자와 환경·시민단체 그룹의 정책 참여 강화해야

셋째, 학계와 환경·시민단체 그룹의 정책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이 있는 7개 주요 집단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해 본 결과, '에너지 관련 학자들'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42%)', '에너지 관련 대기업(39%)',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38%)', '청와대(37%)', '중앙정부(35%)', '지방정부(27%)' 순이었다. 민·기업·관 순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정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지금보다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학자 그룹과 환경·시민단체 그룹의 정책 참여 정도를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경제·산업 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국민의 합의 위에,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년 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나빠졌으며, 특히 '탈원전 정책'은 진보와 보수간의 대립이 더 커졌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려 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5월 기준 약 59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052명, 조사참여 1,23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6.5%, 참여대비 80.7%)
조사일시	• 2021년 6월 17일 ~ 6월 21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